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5. 1. 21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순서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3
1.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...	4
2.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	6
3.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	8
4.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	10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2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1 주요 정책성과

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도록 과학·현장·협력의 핵심가치 아래
‘규제과학’, ‘규제혁신’, ‘규제외교’로 이어지는 행정혁신 체계 가동

안전 인프라

마약류 중독자 전주기 사회재활
관리체계 마련 → 사회안전망 구축

사회재활 지원근거 마련
함께한걸음센터 확대(2→17개소)

노인·장애인까지 급식 안전·영양관리
확대 → 취약계층 급식안전 개선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53%
(120개소) 설치('24년)

지능형 행정

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 혁신
→ 안전관리 수준 제고

수입식품 전자심사(Safe-i24) 도입
스마트 HACCP-GMP 확대

QR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 개선
→ 정보격차 해소

식품정보 푸드QR 도입
의료제품 점자·수어영상 제공 확대 등

규제 과학

규제과학 혁신 뒷받침
「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」 시행

규제혁신

현장중심 규제혁신^{1.0~3.0} 추진

→ 낮은규제·민생애로 해소

총 260개 과제 중 198개 완료·제도화

신기술, 미래산업 규제지원

→ 글로벌 경쟁력 확보

세계 최초 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정
세포배양식품 선제적 기준 마련 등

규제외교

해외 규제당국자 협력 강화

→ 글로벌 규제 선도

^{세계최초} WHO우수규제기관 등재
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설립·운영
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한미 공동개최

규제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 소통

→ 글로벌 진출 지원

덴마크 K-라면 리콜조치 철회
싱가폴과 의약품 제조·품질관리 상호인정

2 개선 필요사항

- 산업 전반의 AI 기술 확산,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대응체계 마련 필요

☞ 생활변화·기술혁신 빠르게 대응해 식의약 안전망은 더 단단하게,
현장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추진

Ⅱ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여건

- **[기술]** 인공지능(AI) 기술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협력의 중요성 확대
 - AI 등 디지털 기술 확산이 단순 업무 효율화와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
 - 빠른 기술변화와 경쟁 심화로 글로벌 기술협력의 중요성 확대
- **[경제]**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확산, 바이오·헬스 산업 국제경쟁 심화
 - 비대면·편의 중심 소비 문화로 최근 10년간 해외직구 4.1배 증가
 - ※ 해외직구 규모('24, 대한상의): ('14) 1.6조원 → ('19) 3.6조원 → ('23) 6.7조원
 - 세계 저성장 기조 속 잠재력이 큰 분야로 시장 급성장, 특히 美의 생물보안법 추진은 국내 바이오·헬스 산업의 성장 기회로도 작용
 - ※ 세계 경제성장률: ('23) 2.5 → ('27) 2.6% / 바이오헬스 산업성장률: ('23) 4.2 → ('27) 4.9%
- **[사회]** 영양·건강 관리의 관심 증가, 마약류 중독도 사회문제로 대두
 - 고령화·다문화가정 확대로 다양한 맞춤형 영양·건강관리 수요 증가
 - ※ 고령화: ('20) 15.7 → ('25) 20.3% / 다문화 혼인: ('21) 7.2 → ('23) 10.6% (출처: 통계청)
 -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% 증가하였으며, 약물남용 위험 인식 부족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약 13% 증가
 - ※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: ('19)1,682.2 → ('23)1,894.1백만정 (13% 증가)

2 업무추진 방향

- 환경변화와 사회 이슈 등에 대응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 필요
 - ➡ **【전략 I】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**
- 식의약 안전 복지의 폭은 넓히고, 격차는 줄이는 노력 필요
 - ➡ **【전략 II】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**
- 기술혁신과 국제기준 선도를 통해 산업 성장 가속화 필요
 - ➡ **【전략 III】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**
- 디지털 기술 활용과 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혁신 필요
 - ➡ **【전략 IV】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**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□ 추진 방향

식의약 **안심**이 **일상**이 되는 세상

안 전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

- 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.
- ②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.

배 려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

- ③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.
- ④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성 장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

- ⑤ 【규제혁신】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.
- ⑥ 【규제과학】 과학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⑦ 【규제외교】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력을 더하겠습니다.

혁 신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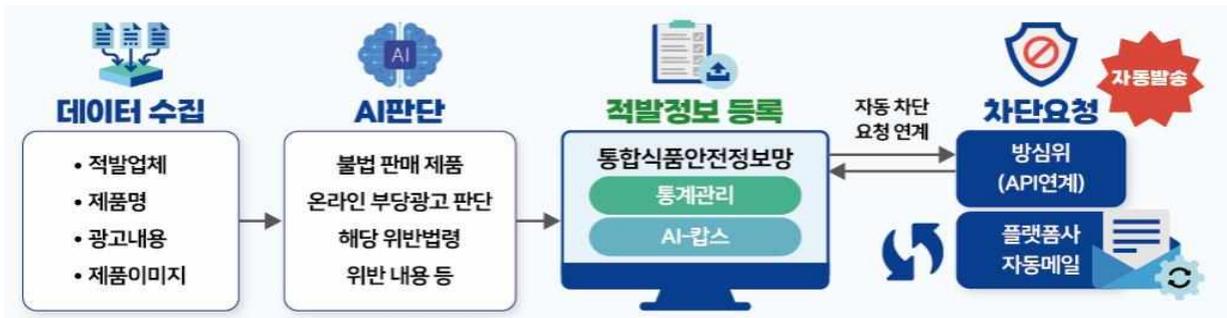
- ⑧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.
- ⑨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를 혁신하겠습니다.

1.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

1]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.

□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·소비 환경 대응

- (감시체계 고도화) AI 모니터링시스템(AI 캡스)을 활용하여 온라인 감시 강화 및 불법 제품 신속차단, 해외 쇼핑물·SNS 개인거래도 모니터링
※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「마약류관리법」 개정도 추진



- (점점강화)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·수거검사 집중, 온라인 유통식품의 검사비율도 2배 확대
※ (화장품, 의약외품, 위생용품) 위해성 확인 제품 국내 반입 차단 법적 근거 마련 (의약품)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「약사법」 개정

□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혁신

- (비만치료제) ‘위고비’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,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·판매, 허위·과대광고 등 집중점검
※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플랫폼에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(복지부 협업, '24.12월~)
- (숙취해소 식품)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·광고를 허용하는 ‘숙취해소 실증제’ 시행(1월~)
※ 자율심의 및 광고물 수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既유통제품은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
- (문신용 염료) 인체 내 주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,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 구축·운영(6월~)
※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개정법률 본격 시행

②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.

□ 다빈도·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국민 다소비 식품 집중관리

- (김치) 절임배추 등(비숙성 김치 원재료)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하고,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선행요건 개선 등 HACCP 운영 관리 강화(1월~)
※ 절임배추 등 HACCP 중점관리 제조공정: (기존) 세척공정 → (개선) 소독·헹굼공정
김치 공장 종사자: (신설)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후 발열, 설사 시 작업 배제
- (달걀) 액란 형태 알가공품(전란액, 난백액 등) 제조업소 전수 점검(3월), 온도변화에 민감한 물세척란 냉장유통 준수 여부 집중점검(6월~)
※ 달걀농장 등 현장에서 살모넬라 오염 여부 검사가 가능한 신속 진단키트 개발('25.下)
- (생식용 굴·육회) 생식굴도매시장 수거검사로 유통초기 신속차단(1월~), 육회제조업체 전수 점검(5월)·생식용 식육 절취 지침 마련(6월)
- (반조리 식품) 집단급식소,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 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소(센트럴키친) 위생관리 집중점검(2월, 8월)

□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

- (처방제한) 의료인의 처방 前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 단계적 확대*(6월~), 프로포폴부터 의료인의 셀프처방 금지 시행(2월)
* 펜타닐('24.6월~) 적용 후 펜타닐 패치 처방량 13.6% 감소 효과 → 메틸페니데이트('25.6월~), 식욕억제제('25.12월~) 적용 확대
- (감시강화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*해 중복·과다 처방 의심 의료기관 핀셋 점검,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 강화(2월~)
* 처방량, 처방건수와 허가사항·안전사용기준 등을 벗어난 처방의 반복·지속 여부 등 종합적·전반적으로 처방사례를 분석
※ 법무부와 협력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수사권 확보(「사법경찰직무법」 개정)
- (집중관리) 중계하수펌프장과 특정지점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에 단속·예방 등 정책역량 집중
※ (~'24)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34~58개소 조사 → ('25~) 불법마약류 유입량이 많은 지역의 중계하수펌프장, 유흥업소 등 지점 추가 94개소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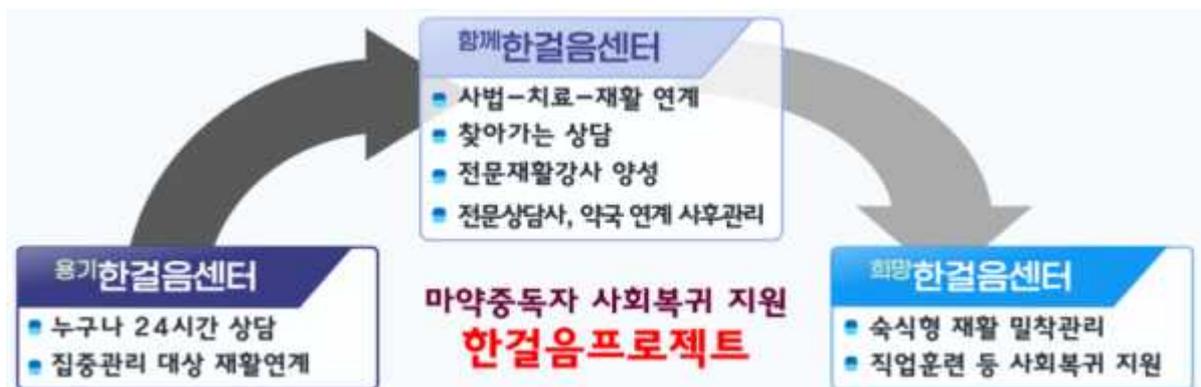
2.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

③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.

□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넓혀가는 환자 치료기회

- (수급 예측) 의약품 제조·수입업체의 공급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앞당기고(60→180일 전),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 부여(4월)
 - ※ 국내·외 공급위기 발생 의약품은 제조소 추가·변경을 우선 심사하고,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주문·제조 등을 위한 업체 참여 공익제약사 네트워크 구축
- (수급 인프라) ‘국가필수의료기기’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현장 필수 품목을 선정, 안정공급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등 국가 차원 관리(10월)
 - ※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에게 치료목적 사용 기회의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 공개,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

□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「한걸음 프로젝트」



- (**8기**한걸음) 24시 상시 전화상담(1342)을 통해 발굴된 집중관리 필요 중독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**함께**한걸음센터 등의 재활과 연계(1월~)
- (**함께**한걸음) ‘사법-치료-재활 연계’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자 확대(1월~), 재활 후 전화 모니터링,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 사후관리 병행(7월~)
 - ※ 마약류 예방교육·재활 전문 상담사 양성을 위한 인증제도 본격 운영(3월)
 - 전국적으로 ‘찾아가는 상담’을 통해 지원 필요 대상 선제적 발굴·재활 연계(7월~)
- (**희망**한걸음) 시설에 입소하여 상담·재활·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**숙식형 재활센터 설치·운영 타당성 조사**(3월~)
 - ※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고용부와 협업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추진

④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□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 활용 격차 해소

- (제공방식 다변화) 푸드QR 정보제공 식품 지속 확대*,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·제공(11월)
 - * ('24) 15개 제조업체 식품 → ('25) 매출상위 100대 제조업체 식품 + 수입식품
- 자가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(인슐린주입기·혈당측정기 등) 판매·임대 시 사용법 등 안내 의무화 추진(4월~)
 - ※ 시연영상을 제작하여 의료기기안심책방에 공개,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시연
- (제공정보 확대) 가맹·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·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추진(3월~)
 -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·농촌어린이·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(언어·체험)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 제공
 - ※ (다문화가정) 식생활 교육과 안내자료의 다국어 제공 점진적 확대 (농촌어린이) 찾아가는 체험교육인 튼튼먹거리 탐험대 확대, VR·메타버스 활용 (어르신) 복지관 등과 연계한 '어르신 건강 밥상'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

□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

- (급식 통합관리)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시설을 통합 관리·지원하는 「급식안전관리법」 제정(10월)

【「급식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급식 안전·관리체계 개편】

구 분	전(前)	후(後)
①급식관리 체계 일원화	소관 부처별 관리	식약처에서 정책 총괄조정
②급식시설 관리 범위 확장	집단급식소(50인 이상)	모든 급식제공 시설
③급식관리 지원 대상 확대	일부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	모든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

- (영양맞춤) 노인·장애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지속 확대*, 개인 건강·영양상태에 맞춤형 급식메뉴 제공서비스 시범 운영(1~11월)
 - * 이행목표: ('24) 114개소 → ('26) 228(전국 시·군·구 설치 완료 목표)
- (건강맞춤)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·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'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' 시행(1월)

3.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

⑤ 【규제혁신】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.

- 산업 성장의 걸림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규제 정비 체계 완비
 - (규제혁신 4.0)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‘허들규제’를 과감히 개선하고, 민생활력과 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‘민생체감형 규제혁신’에 역량 집중
 - (규제체계 도입)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인력 양성, R&D 등 지원 근거를 정한 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시행(1월)
 - ※ 디지털의료기기는 '25.1월,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는 '26.1월 시행

⑥ 【규제과학】 과학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-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기간을 앞당기는 전략적 지원
 - (연구지원) 국가 R&D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·절차,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‘규제정합성 검토’ 제도 본격 운영(4월~)
 - (기준제시) 현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유전자 진단기술 등 활용 제품의 개발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신기술의 제품화 선도(3월~)
 - ※ 유전자가위 기술 이용 체외진단제품, 항체-약물 복합 표적치료제 등 허가 가이드
 - (제품화 지원) 임상·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~신속심사를 연계하는 ‘길잡이 프로그램’을 운영하여 혁신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
 - ※ 기존 의료제품 분야별 제품화 지원(상담) 프로그램을 ‘사전상담’으로 일원화



□ 규제과학의 인적 인프라를 다지는 전문 인재 양성

- (교육과정) 美·EU 수준의 심사 이론교육·현장실습 과정 운영(2월~),
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 지원(연중)
- (인프라) 교육과정 개발, 교육·훈련, 채용 연계 등을 위한 인재 양성
정보시스템(규제과학인) 활용 확대(1월~) 및 전담기관 지정·운영(5월)

7 【규제외교】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력을 더하겠습니다.

□ 국제사회의 규제 방향을 이끄는 규제역량 리더 ⇨ Global leader

- (위상강화) GMP 규제역량 피평가국에서 평가국으로 역할 전환*,
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 추가를 추진하여 규제 선도국 인정
*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(PIC/S) 가입을 신청한 중국의 GMP 규제역량 평가(7월~)
- (이슈주도)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(AIRIS) 개최(9월), APEC 연계
아태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(APFRAS) 개최(5월)로 글로벌 규제 제시*
*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HACCP 운영, 푸드QR 적용 정보제공 혁신 등 논의 과제 제시

□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 네트워크 구축 ⇨ Partner

- (수출장벽 해소) 다자(일본·대만·싱가폴) 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(9월~),
신흥 수출국에서 국내 의약품 허가절차 간소화 지위 획득 추진(1월~)
- (기술협력) 美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(항암백신) 공동연구(4월~),
유럽의약품청(EMA)과 의약품 공동 허가·심사(OPEN 프로그램) 참여
-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(GHWP)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
가이드라인 개발(11월~) 등 선진 규제체계 공유·협력

□ 유망기업과 시장개척 기업 대상 전략적 성장지원 ⇨ Supporter

- (연계지원)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,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
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'LINKUP 프로그램' 운영('25~)
※ 규제설명회·수출상담회 개최 : 일본·중국·베트남 등 전략적 진출국 대상(연3회 이상)
- (전담지원)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(Regulatory
Manager) 운영*, 기업별·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 제공
* ('24) 품목별 전담 PM(Product Manager) → ('25) 기존 + 6대륙·국제기구 전담 RM

4.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

⑧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.

□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

- (상담서비스) 식품의 표시, 기준·규격,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원(가칭 Food Agent) 운영('25~)
※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'AI 코스봇'도 시범운영(1월~)



- (심사서비스) 검사관이 하던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를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(SAFE-i 24)을 통해 자동 신고수리 적용 추진
※ 구강관리용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우선 개발('25) 후 적용 대상 지속 확대,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적용 근거 마련(개정)에 맞춰 시행
- (발급서비스) 식의약품 시험·검사기관이 전자 시험성적서로 발급·유통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'eDATA-CERT' 도입(10월)
※ 위변조 방지, 민원편의 증진, 발급 등에 필요한 시간·인력·비용 절감 (연간 114억원의 정부·민간·제조업소 시험·검사기관 비용 절감 기대)

□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

- (AI 수입검사관) AI 활용 현지실사·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해 현지실사 실시('25~)
- 다빈도 부적합 식품유형별 AI 위험예측 모델 지속 개발, 통관검사에 활용('24년 과자류, 조미식품 → '25년 농·임산물가공품, 수산물가공품 적용)
※ AI 기반 수입수산물(어류) 어종·신선도 판별 모델 개발, 검사현장 시범 적용(11월)
AI 기반 한약(동물성+식물성 생약) 관능검사 보조기술 개발도 추진 중(~'27)
- (AI 의약품심사관) 원료의약품 품질 AI심사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('27년~)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, DB 모델링,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 추진
※ 완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AI 심사체계 구축 R&D도 수행('25~)

9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를 혁신하겠습니다.

□ 신약 허가·심사 체계 혁신으로 신속 허가 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

- (신속성)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여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제공, 신약은 자료심사,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해 허가기간 단축(420→295일)

【 허가·심사 인력·절차 개선 】

항목		현행	개선 내용
인 력	품목별 전담팀	없음 ※ 개별 담당자 중심 검토	신설(비상주), 10~15명
	제출자료 우선심사	일부 약물(희귀질환 등) 적용 ▶	신약 전체로 확대
절 차	GMP 우선실사	미적용	적용
	GCP 신속실사	미적용	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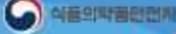
- (투명성) 대면상담 횟수를 확대(3→10회)하고,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일부 보완되는 대로 먼저 검토하는 ‘수시검토 절차’ 신설
- (전문성) 의·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인력 비중 지속 확대(31→70% 목표), 최신기술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해 심사 전문성과 규제역량 제고
※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담당자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(기본, 핵심, 심화) 실시

□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·심사체계 개편

- (신속 시장진입)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와 심평원 신기술 확인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, 의료기기 허가 후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진입(490→80일)
※ (기존)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·신의료기술평가·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진입 → (개선) 의료기기 허가·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,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 실시
- (임상평가)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·경험·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 도입(7월)
※ 디지털의료기기 등 140여개 품목부터 우선 적용 후 모든 혁신 의료기기로 확대



Ⅳ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

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신약·신기술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약 허가 기간 단축 (420→295일)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전담 심사팀 신설 ☑ 전문상담 확대 ☑ 신속심사 적용 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기술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(490→80일)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식약제인허가(1단계) 상행위신기술 확인(2단계) 동시 시작 ☑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제도 도입 </div>	
국민을 위한 식생활 맞춤 정책이 확대됩니다.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금식안전관리법」 제정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모든 금식시설을 통합 관리해 위생관리 표준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인·장애인 금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⁽²⁴⁾120 → ⁽²⁶⁾228개소 (전국 시·군·구 설치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분·조합 제품 판매·구매 가능</p>
소비트렌드 변화에도 안전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.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만치료제 집중관리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이상사례 모니터링 ☑ 온라인·의료기관의 불법유통, 허위광고 등 점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 시행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만 숙취해소 표시·광고 허용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체계 운영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문신용 염료 자가품질검사, 수입검사 실시</p>
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'한걸음'이 더 가벼워집니다.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응기 한걸음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24시간 전화상담 ☑ 집중관리 대상은 재활연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함께 한걸음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사법-치료-재활 연계 확대 ☑ 찾아가는 중독상담 ☑ 재활 종료 후에도 주기적 관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희망 한걸음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☑ 숙식형 재활 밀착 관리 ☑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</p>